

韓, 연금개혁 동력 상실 위기 “해외 성공사례로 해법 찾아야”

여야,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 전문가들 해외사례 참조 제언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생 지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약속한 연금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세대 간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복잡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적연금을 개혁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0일 종료된다. 정기회의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 구성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의 종료 직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만,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만큼 국민연금 논의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여·야 견해차가 극명해,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세대별 이해관계 차가 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해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는 31.3%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는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20대(47.5%)와 30대(45.6%)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약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앞서 공적연금 개혁을 완수한 스웨덴·일본·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1998년 공적연금의 재정 소진 전망에 따라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를 연금보험료로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을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대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5%로 낮췄다.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일부 줄었지만, 총 보험료율을 높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13.6%였던 보험료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보험료율을 최대 18.3%로 고정하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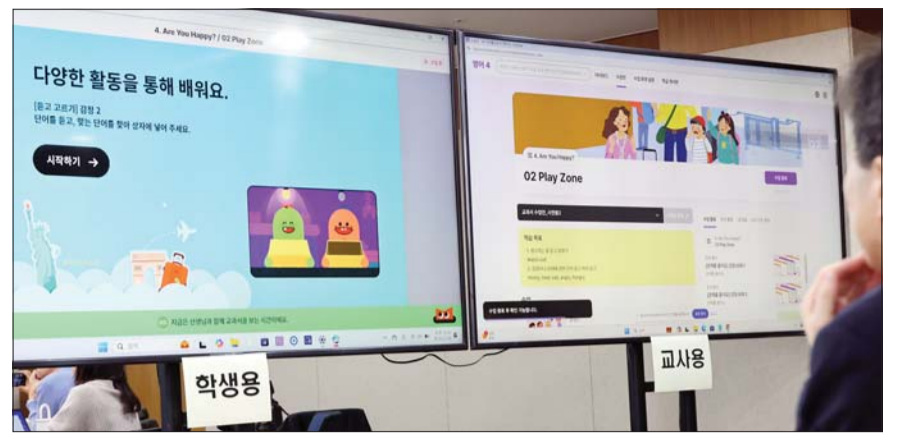
국내에서 도입 논의 중인 자동조정 장치와 유사하지만, 가구 단위의 소득 대체율을 최저 50%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6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적 반대가 만연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금 운용 과정 및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 진영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이 공적연금을 신뢰하게 된 만큼, 캐나다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적 지지 속에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1998년 스웨덴, 2004년 일본, 2016년 캐나다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 나라들의 개혁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된 AI 디지털교과서 실물 시연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 ‘역대 최저’

내수부진 지속... 티메프 사태도 영향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해 온 온라인쇼핑 거래액 또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의 여파도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2845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129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은 올해 4월 10%대, 5월과 6월 7%대, 7월 5%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둔화한 뒤 10월 들어 1% 미만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이쿠폰서비스가 전년 대비 51.0% 감소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이쿠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고, 지난해 10월 증가율(11.4%)이 높았던 저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온라인거래 시장의 움직임도 코로나19 당시 두 자릿수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음식·식품(17.5%), 음식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의복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간절기 의류 수요가 사라지고, 바로 동절기 의류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의 경우, 내년도 긴 추석연휴 시기 항공편 예매가 10월 오픈된 영향으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식품(14.3%), 음식서비스(12.5%), 여행 및 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4227억 원으로 4.2%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시 이쿠폰서비스(-40.7%)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식품(20.8%), 음식서비스(15.9%), 농축수산물(20.1%)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2%), 음식·식품(14.5%), 의복(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상품마다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서비스(98.6%), 이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백화점업계, 고객 중심 쇼핑공간 새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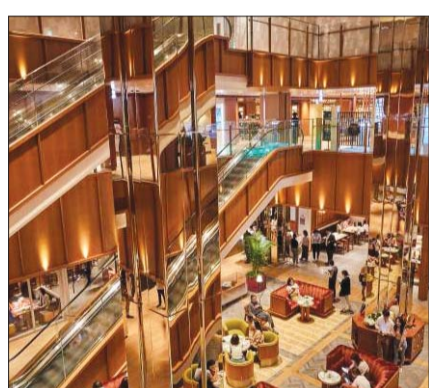
오프라인 쇼핑 가치 재정의 나서 식료품관, 체험형 콘텐츠 등 확장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주요 백화점들이 식료품관 리뉴얼과 체험형 콘텐츠 공간 도입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매출원이었던 패션과 의류에서 부진이 이어지자, 식료품관 및 고객 체험형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불황을 맞은 주요 백화점들이 식료품관 리뉴얼을 진행하고, 콘텐츠 중심의 고객 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쇼핑 공간 재단장에 나선다. 패션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식료품 및 콘텐츠 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공간 리뉴얼에 나섰다. 지난 2월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를, 6월에는 와인 중심 공간 ‘하우스 오브신세계’를 새롭게 선보였다. 스위트파크는 국내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를 모은 테마파크 형식으로, 하우스 오브신세계는 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공간으로 구성됐다.

신세계는 내년까지 6000평 규모의 식품 전문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5년 3월에는 푸드마켓을, 8월에는 간편 식품관과 카페 등 공간을 새



신세계강남점 ‘하우스 오브신세계’ 전경



현대백화점 ‘가스트로 테이블’ 전경

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의 팝업 전용 공간 ‘더 스테이지’에 이어 센트럴시티 1층 광장의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활용한 전시·체험형 팝업존 ‘오픈 스테이지’를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오는 2026년까지 본점, 잠실, 강남, 인천, 수원, 동탄, 광복, 부산 본점 등 8개 핵심 점포를 재단장한다. 특히 상권을 고려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식품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 수원의 성공을 발판 삼아 송도, 수성, 상암, 전주 등에 쇼핑몰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점도 리뉴얼해 2030년까지 총 10여 개의 미래형 쇼핑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7월 압구정

본점 식품관을 재단장해 ‘가스트로 테이블’을 선보였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중동점 지하 1층 식품관을 새롭게 단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백화점 3사는 콘텐츠 중심 전략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25년 2월까지 중동점 9층 문화홀에서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 ‘퓨처 그라운드(FUTURE GROUND)’를 운영한다.

다만, 식품관 리뉴얼과 콘텐츠 전략이 당장 가시적인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공간’이 중요한 곳인 만큼, 식료품관 리뉴얼과 콘텐츠 중심으로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리뉴얼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적 상승이 단기간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최상목 “전례없는 단독 감액안 철회해야”

(경제부총리)

>> 1면 ‘감액 예산안...’서 계속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 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

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식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